

정책포럼 요약자료

새로운 시대 균형발전 전략 및 실행과제¹⁾

권영섭²⁾(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요 약

- 전국토 약 12% 면적에 전국 인구의 약 50%,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기관 등이 집중되었으며, 지난 23년(1995~2018)간 수도권에 각종 주요기능 등에 대한 집중도가 증가하고 **불균형이 심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이분법적 구도를 극복하고 **분권과 경쟁력 및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공급**을 감안한 규모로 공간단위를 설정하여 추진
- 새로운 균형발전은 국가(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보면 **공간적 배치의 조화와 역학적 안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
- **인구부문**: 고령자기준 상향, 지방 의료복지시설 확대, 유아돌봄제도 확대, 다자녀가구 특별지원혜택 강화, 출산장려, 청년 일자리 특별대책, 은퇴자 지방 및 농촌 정착 지원, 은퇴인력 재고용, 지역간 교통인프라 확충, 지방대도시 육성 등이 제시
- **산업부문**: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수도권 (대)기업 본사 또는 계열사 이전, 지방 일자리 창출, 지방 신산업(클러스터) 육성, 산학연 연계 강화, 수도권 규제 강화, 리쇼어링기업 지방정책에 대한 혜택, 지방에 첨단산업·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 **교육부문**: 수도권(우수·명문)대학 이전, 지방거점국립대학 육성, 지역별/권역별 특성화대학 육성, 지방 우수 중등교육기관 유치, 지방 명문고(특목고/자사고 등 특성화교육기관) 육성, 국공립대학 평준화 또는 공동하위제, 창업 또는 취업 중심 대학교육 강화, 지방 국립대학 무상교육 등
- **공간부문**: 광역권 공간계획 수립, 권역별 또는 광역권별 거점도시, 지방 도로, 의료, 문화, 철도 등 인프라 확충, 지방산업규제 완화, 농산어촌 관광산업 육성, 동서교통망 연결,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 마련 등

1) 본 브리프는 제6회 국가정책대학원 정책포럼 '새로운 시대 균형발전 전략 및 실행과제'의 발표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2) 권영섭 : 행정학박사, 전 국토연구원 국토·지역연구센터장 역임,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불균형 현황과 문제점

<표 1> 수도권 집중도 및 지역불균형 변화 (1995~2018)

1.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실태

- 전국토 약 12% 면적에 전국 인구의 약 50%, 경제활동과 의사결정기관 등 집중
- 지난 23년(1995~2018)간 수도권에 각종 주요기능 등에 대한 집중도가 증가하고 불균형이 심화
 - 특히 기업체, 은행 예금과 대출금, 공원면적,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도서관, 고등학생, 재정자립도, 지방세액, 국회의원 등 주요 지표에서 수도권 증가율이 높음.

구분		1995	2005	2015	2018	증가율(95-18)	변화유형
경제활동	GRDP	3.56	3.89	4.23	2.77	-0.80	↗
	기업체	43.7	46.6	47.4	47.2	3.44	↗
산업구조	서비스업체	46.3	45.2	47.1	46.9	0.62	↗
	제조업체	55.6	57.2	50.0	49.7	-5.92	↘
금융	은행예금	64.3	67.8	69.2	70.2	5.99	↗
	은행대출	58.9	66.7	65.3	65.2	6.28	↗
도시기반	공원	30.4	30.0	38.2	39.1	8.64	↗
	도로	23.5	23.2	22.3	23.1	-0.46	↘
보건복지	공공체육시설	40.7	41.9	32.9	31.1	-9.62	↘
	문화시설	40.9	40.7	36.4	36.8	-4.05	↘
	병상	42.9	45.0	35.7	35.1	-7.77	↘
	사회복지시설	29.7	29.3	64.5	65.4	35.70	↗
	의료기관	46.4	47.9	51.9	51.9	5.54	↗
교육환경	대학	35.2	36.0	33.9	34.1	-1.07	↘
	도서관	23.5	25.7	42.9	44.4	20.90	↗
	고등학생	40.2	46.7	47.7	47.9	7.77	↗
지방재정	재정자립도	1.6	1.8	1.7	1.9	0.38	↗
	지방세액	52.4	57.6	54.5	59.9	4.46	↗
의사결정	국가공공기관	21.9	24.3	20.5	20.5	-1.38	↘
	기업본사	64.5	59.7	57.7	57.9	-6.64	↘
	국회의원	33.2	44.9	48.2	48.2	15.02	↗

자료: 이관률(2020)

- 2019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50.0%를 상회하여 11.8% 면적에 전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반면 비수도권 군부지역은 인구소멸 우려
 - 인구는 경부축에 집중된 반면 고령인구비율은 백두대간축에 높게 분포되어 있어 지방소멸 우려
- 2009년부터 2019년간 수도권으로의 이동 요인은 직업, 교육, 주택, 가족, 자연환경 순이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직업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가 많음.

[그림 1] 전입사유별 수도권 순이동(2009년-2019년)



자료: 통계청(2020)

2. 불균형의 문제점

-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2019년 3월 기준 삶의 질 지표를 보면 고용률과 실업률 악화, 대학졸업자 취업률 악화, 가구부채비율 악화, 대기질·수질 만족도 악화, 1인당 주거면적 악화, 통근시간 악화, 독거노인비율 증가, 산재사망률, 화재사망자수 증가,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등 악화
- 서울과 경기 지역은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과 대출 부담 자가비율이 높고,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이 높고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이 높으며, 최저거주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높고 비정상적 거처가구 비율이 높아 낮은 삶의 질의 한 원인으로 작용

II. 역대 균형발전정책 추진 성과와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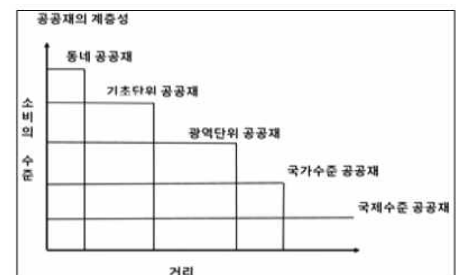
1. 우리나라 주요 균형발전 정책과 제도

- 60년대에는 1964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1969 대도시 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
- 70년대에는 1970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1971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1972 대도시인구분산시책(1973 대도시인구분산책), 1975 서울시 인구소산계획
- 80년대에는 1981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1982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건축물 규제계획, 198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1984 수도권정비계획기본계획(1984~1991)
- 90년대에는 1991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1994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전면 개정, 1997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 1999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2000년대에는 200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4 정부 행정기능, 공공 기능 지방이전정책이 추진됨. 2005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 2010년대에는 2012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으며, 2019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2. 주요 균형발전정책의 공간단위

- Oates(1972)는 분권화정리를 통해서 중앙-광역-기초 정부간 재정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제시
- 공공재 공급의 계층구조 또는 공간범위로 보면 국제, 국가, 광역, 기초, 동네수준으로 구분가능하고 국가, 국제수준의 경우 중앙정부가 공급한다면 광역과 기초단위는 지자체가 공급을 분담하는 것이 적절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업추진범위는 대체로 5개 광역권(권영섭 외, 2019)
- 광역권역의 대안으로 2, 3, 4, 5, 5+2, 5+3개권 제시

[그림 2] 공공재 공급을 위한 계층 형성



자료: 안영훈(2009), 권영섭외(2019) 재인용

3. 향후 균형발전 정책에의 시사점

- 국가균형발전정책, 국토균형발전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하여 다음 정부에서는 균형발전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이분법적 구도를 극복하고 분권과 경쟁력 및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공급을 감안한 규모로 공간단위를 설정하여 추진
- 균형발전 목표, 지표, 계획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달성이 용이하도록 국가, 권역, 지역, 생활권 등의 지표 설정
- 균형발전이 국가균형발전이나 지역균형발전인지, 특정분야 균형발전인지 등 부문과 지역단위, 목표와 측정지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추진할 필요
-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경우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미진한 부문의 보완을 통한 추가적인 정책 발굴 필요
- 지역별 개별 사업만으로 지역발전이 어려우므로 지역단위 패키지 정책, 종합 정책 추진, 지역간 차별적 정책 추진

Ⅲ.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1. 새로운 균형발전의 개념

- 새로운 균형발전은 균형발전, 특히 국가(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보면 **공간적 배치의 조화와 역학적 안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
- 법적·정책적·학문적 정의를 종합하고 각 지역단위에서 지역단위, 지역경쟁력, 고용기회, 삶의 질 등과 관련된 지표가 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발전시키는 것을 균형발전으로 정의
- 균형발전은 각 지역 단위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광역자치단체(광역시와 광역시)간, 기초자치단체(시와 군)간은 기본적으로 면적과 인구밀도 등 지역특성이 극명한 차이가 있어 지역간 분석은 가능한 차이가 없으면 좋은,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하는 단위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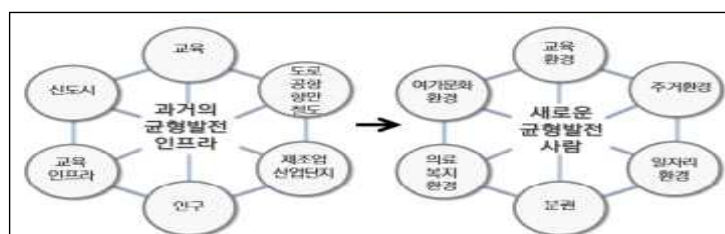
2. 새로운 시대 여건변화 전망과 대응과제

구분	목표	대응과제	
저출산	인구 5천만명 유지	공공기관 배우자 근무지 이전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고령화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 건강의료보험 재정 건전화	권역별 치매마을 조성 국민 10대 질병, 치료 위한 건강마을 조성 권역별 산림복지휴양단지, 해양치유·휴양단지 조성	
여가시간증가	관광·휴양 인구 2배 증대	국민여가지대 조성, 노후 관광단지 재생	
4차산업혁명	융합네트워크화	노후 산업단지 재생, 노후 도심과 노심 도시 스마트시티화 규제완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일자리 감소 고급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주52시간) 첨단산업 일자리 생산자서비스업 일자리 서비스업 고급일자리	서비스산업 육성(건강장수산업 등) 첨단 농업어업 육성 인재 DB은행 구축 및 헤드헌터 육성 기업이전비용 지원	노후산업 재생을 통한 신산업 유지 중소도시에 특화산업 육성 신산업 창출(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상기후, 미세먼지, 토양오염 등 환경문제	건강권 도입	직주근접과 복합적 토지이용, 친환경적 대중교통수단 도입 도시숲·미세먼지 없는 마을·산림치유마을 조성 토양오염 정화를 통한 국토환경보전과 주민건강도모 도서벽지 에너지 자립화	
바이러스, 전염병 확산	적정밀도	도시 밀도 완화	
에너지 고갈	화석연료 줄이기	신재생에너지, 수소 전기 에너지 사용, 주택·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분권화	광역권 단위로 분권화 4~5개의 광역권 형성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 광역지자체 광역사업 추진체계 구축	

3. 여건변화 전망에 따른 당면과제

-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4차산업혁명, 베이비부머 은퇴자 증가, 코로나19 등 우리사회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요인들에 주목하여 새로운 사회시스템, 새로운 성장시스템, 새로운 공간시스템을 모색하고자 함.

[그림 3] 과거의 균형발전과 새로운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IV. 새로운 시대의 균형발전 전략

1. 균형발전의 바람직한 방향

1)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

- **인구부문:** 고령자기준 상향, 지방 의료복지시설 확대, 유아돌봄제도 확대, 다자녀가구 특별지원혜택 강화, 출산장려, 청년 일자리 특별대책, 은퇴자 지방 및 농촌 정착 지원, 은퇴인력 재고용, 지역간 교통인프라 확충, 지방대도시 육성 등이 제시
- **산업부문:**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수도권 (대)기업 본사 또는 계열사 이전, 지방 일자리 창출, 지방 신산업(클러스터) 육성, 산학연 연계 강화, 수도권 규제강화, 리쇼어링기업 지방정책에 대한 혜택, 지방에 첨단산업·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 **교육부문:** 수도권(우수·명문)대학 이전, 지방거점국립대학 육성, 지역별/권역별 특성화대학 육성, 지방 우수 중등교육기관 유치, 지방 명문고(특목고/자사고 등 특성화교육기관) 육성, 국공립대학 평준화 또는 공동하위제, 창업 또는 취업 중심 대학교육 강화, 지방 국립대학 무상교육 등
- **공간부문:** 광역권 공간계획 수립, 권역별 또는 광역권별 거점도시, 지방 도로, 의료, 문화, 철도 등 인프라 확충, 지방산업규제 완화, 농산어촌 관광산업 육성, 동서교통망 연결,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 마련 등

2) 미래 균형발전의 공간·산업경제·인적자본육성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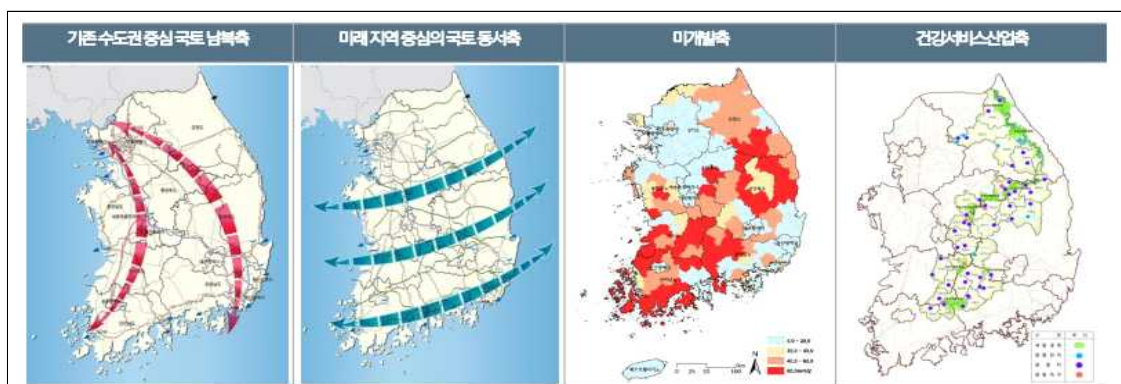
- 미래 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전략은 선택과 집중보다는 **다층적 공간 단위**에 따른 **다차원적 전략 추진**
- 고부가가치 중심의 **특화·차별화·전문화·연계 전략**을 통해 **지식산업화**
- 미래 균형발전을 위한 인적자본 육성 전략은 **수월성 교육, 잠재력 발굴 교육** 추진

2. 공간기반전략

1) 글로벌 메가 혁신성장벨트 구축

- 기 구축된 경부축, 호남축, 경강축을 활용하고 미완인 강호축의 강릉-호남축 연계하고, 동서남해안권 4각 벨트(서해안벨트, 남해안벨트, 동해안벨트, 남북접경지역벨트) 구축 및 거점도시 육성
- 남북축 중심의 국토발전에서 동서축 중심의 국토발전으로 대전환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미개발축인 강호축을 건강서비스산업축으로 육성
- 공간 위계를 고려한 차등적 정책 추진과 상대적 저개발권을 육성하는 전략이 중요

[그림 4] 혁신성장벨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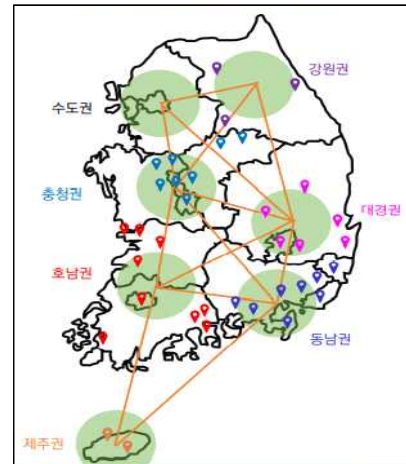


자료: 권영섭(2018)

2) 5대 광역 혁신성장권 육성

- 인구 500만명 규모의 5개 글로벌 혁신성장권 육성을 통해 강중국으로 발전 가능한 수준이며, 광역시와 주변 광역도 지역은 역사적 동질성을 갖고 있음.
- 교외화·광역화로 통근·통학 등 연계가 긴밀하며, 광역적 집적과 특화 및 산업밸류체인이 우수, 특별 지방행정기관 등이 광역적으로 시·도 통합하여 관리
-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역내 통합조직과 통합청사 마련을 위해 권역중심의 분권체제 구축
- 시·도 경계를 넘는 업무를 담당할 광역 연합 구성하여 재원, 인력, 사업을 이관하고 각 시·도는 행정 경계 내의 업무만 추진
- 5대 광역 혁신성장권 구축, 고속철도 역세권을 활용한 광역권내의 경쟁력 제고, 5대 광역 혁신성장권의 구축을 통해 자치권을 확보하고 육성전략 마련, 세종시와 혁신도시간 교통망 1시간 30분 이내로 단축

[그림 5] 권역간·권역내 도시와 지역간 연계체제 구축



3. 산업육성정책 전환 전략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에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부가가치)이 제조업의 생산부문을 상회하므로 서비스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산업의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고학력 고용 창출에도 중요
- 우리나라는 지난 39년간 중추관리기능, 연구개발기능, 사무관련기능 등의 비중이 판매서비스기능이나 생산기능보다 크게 증가하여 산업기능이 고도화되었으나, 제조업 부문의 연구개발기능과 중추관리기능이 고도화 필요
- 서비스업 제조업의 차별적 지원제도 개선, 지역특화전략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업을 지원 육성, 4차산업혁명을 견인할 부가가치 높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4. 인적 자원기반

1) 브레인풀 활용

- 해외동포,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자산가, 연구개발자, 과학자 등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인력 DB 구축,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head hunter 기업 창업 촉진을 통해 시·군내, 시·도내, 지역 간 연계

- 베이비부머 은퇴전문가를 활용하여 비수도권 지역 전략·특화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우수 교육 및 정주여건 조성을 통한 젊은층 이주 촉진

- 비수도권 지역에 우수학교 제도 도입시 조기 유학자 수 대거 유치 가능하며 우수병원을 유치하거나 대학병원을 전폭적으로 지원,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도시의 의료여건 개선

3) 지방공동화와 대학 소멸 방지

- 대학은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공공재 중의 하나로 권역별 특성화된 대학을 육성하여 균형발전 달성 필요
- 우수한 대학을 가진 대학 인근에 사이언스 파크나 리서치파크를 조성하여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
- 거점국립대학 지정시에는 거점대학을 특성학문분야를 중심으로 특화시키고, 주변지역의 산업단지나 연구단지 또는 특정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마련

V. 새로운 시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실천과제

1. 글로벌 메가 혁신성장벨트 구축

- 중부권 육성을 위해 동서축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강호축 육성을 위해 강남-호남에 이르는 강호축을 건강서비스산업축으로 육성, 관광 및 산림휴양·복지와 연계, 인프라 거점과 주변지역을 연계
- 남부권 육성을 위해 부산-전남에 이르는 남해안축을 고속화하고 첨단제조업과 관광서비스업을 육성하고, 부산-목포의 남해안 축상의 도시들과 지리산을 연계하여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하며, 창원-진주·사천-여수·순천·광양-광주-목포 등 중후장대형 제조업 도시들의 산업을 첨단산업화
- 축을 구축하는 과제는 인프라 연계 및 다양한 산업을 연계협력사업과 인적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어야 하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특별법과 접경지역지원법에 근거한 사업 발굴 및 추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연계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초광역협력사업을 발굴 및 추진**

2. 광역 혁신성장권 육성

- 적정 인구구조 유지를 위한 인구 500만명 규모의 글로벌 혁신성장권 육성하여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부울경권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연구개발·생산 네트워크 구축
- 세종시와 혁신도시 간 교통망 1시간 30분 이내로 단축, 고속철도 역세권을 활용한 광역권 내외 경쟁력 제고, 5대 광역 혁신성장권의 구축을 통해 자치권을 확보하고 육성전략 마련
- 권역별 5대 핵심 프로젝트 발굴하고 광역권 단위 균형발전 정책 추진, 균형발전을 추진할 5개 광역청 설치 및 거버넌스 체제 구축
- 광역시와 광역도를 통합하여 통합청을 설치하고 이 조직과 관할범위를 균형발전의 주체이며 공간단위로 설정
- 광역혁신성장권 육성을 위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합과 2~5개 광역자치단체의 연합을 구성**
- 중앙정부는 지방에서 수행하던 중앙정부의 업무는 토압청으로 권한을 이양,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는 연합청과 계약을 맺어 추진
- 광역혁신성장권에서는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권역내 업무를 통합청과 연합청이 협력하여 추진
- 각 통합청은 타 통합청과 긴밀히 연계하고 협력하여 차별화된 5대 핵심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광역혁신성장권 단위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

3. 지방 경쟁력 거점 육성과 다핵구조 구축

- 인구 유입 및 증가와 경쟁력을 강화(권역 거점의 특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행정기능, 공공기능, 대학기능, 연구개발기능, 산업생산기능, 주거기능 등이 활용되었고, 이 중 일부는 40~50년이 경과 노후화되어 경쟁력이 상실됨.
- 지방 대도시,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해 산업기반 확충 및 유희공간 활용, 혁신도시 등 시도별 혁신거점체계 구축(2차, 3차 공공기관이전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교통체계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간 연계체계 구축, 제도개선을 통한 관광레저 기업도시들의 활성화(예: 1가구 2주택 중과세 제외 등), 제조·연구개발 기업도시들의 글로벌 벨류 체인 구축
- 대학도시·예술문화산업도시 등 도시 특성 특화·다양화

1)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 참여정부시절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차라면 2차 공공기관이전을 통하여 1차의 미흡한 규모를 충원
- 3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연구개발역량 제고, 2,3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에는 신도시 조성보다는 도심, 기존 연구원 인근, 또는 산업단지 내부 또는 인근 등으로 배치

2) 기업도시 활성화

- 참여정부시절 추진한 기업도시정책의 1가구 2주택 중과세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도시 활성화
- 기업 본사나 제2본사 또는 지역본부 이전을 통한 지역산업의 활성화
- 에너지 도시(수소산도시, 2차 전지도시, 그린뉴딜 도시 등), 인공지능도시, 모빌리티도시 등 미래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과 종사자들을 위한 기업도시 조성

3) 대학도시 활성화

- 비수도권 대학 부지내(캠퍼스 혁신파크) 또는 대학 인근에 사이언스 파크 또는 리서치 파크 등 조성을 통해 실험실 창업과 동아리 창업 후 성장하는 기업이 입지할 공간과 지원 시스템 마련
- 비수도권 거점도시에 입지한 우수한 이공계 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

4) 연구개발도시 조성: 부처별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에 버금가는 정책 발굴

- 이공계 공공기관의 재배치와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본사나 제2본사, 연구센터 등이 입지한 연구개발도시 조성
-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같은 과학연구개발도시를 5개 광역거점별로 1곳씩 추진
-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은 부처별 사업을 발굴하여 5개 광역거점별로 1곳씩 추진

5) 병원도시와 메디클러스터

- 지방대도시에 입지한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 주변지역을 베디 클러스터로 조성하여 병원 관련 산업의 집적화
- 지방대도시나 주변지역에 1곳씩 조성하여 수도권이나 서울 대형병원으로의 원정 진료 병원 수요를 권역 내에서 흡수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의 취약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6)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산업입지 공급

- 착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단지는 2019년 3분기 현재 전국에 447개가 분포하고 있어 재생이 필요한 수많은 단지가 도시내 입지
- 첨단산업, 신산업,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NBEC 산업이나 기업들은 새로운 첨단인프라와 시스템을 요구하므로 대도시내 첨단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 신속히 추진

7) 베이비부머 전문가를 활용한 미래 첨단신산업 육성

- 베이비부머 은퇴전문가를 활용하여 미래 첨단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및 대졸이상 경제활동 인구 비중을 높여서 인재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유입의 계기로 활용
- 비수도권에서 이공계 고급인력이 일하며 정주하고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은퇴후 5~10년간 지역 출연연 분원이나 기업연구소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4. 농산어촌 르네상스를 위한 도농상생발전 촉진 과제

- 약 1,600만명의 베이비부머가 일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바 이들의 성향에 따라 농산어촌이 다양한 유형으로 르네상스 기회를 맞이할 수 있으며, 선호 유형에 따라 도시에 살고자 하는 사람과 도시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으로 구분 가능

[그림 6] 기간별·거주 희망 유형별 과제

도시형	단기 Nomad형			장기 정주형	
	구분	단기형 (1일~1주일)	중기 체류형 (2개월~8개월)	장기 정주형	
이 도 형	도시 거주형	자연휴양림,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백두대간테라피단지, 힐리언스, 힐랜드 등	신규 조성 필요	은퇴자 복합 임대주택 (공무원연금공단), 사이언스빌리지 (과학기술인공제회), 일본 후지사와 SST	
	도시·농촌 반반 거주형	-	은퇴자 공동체 마을 (계절형)	주말농장(다차) (5도 2촌 ~ 2도 5촌 등)	
	농촌 거주형	-	신규 조성 필요	개인적 이도형	귀농·귀어·귀촌형
				집단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1) 주말농장형·다차형

- 주중에도 도시에 거주하고 주말에는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모델로 은퇴후 자연스럽게 농산어촌에 정착하거나 은퇴후에도 도시와 농산어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유형임.
- 해외에는 일본의 2지역 거주 체류형의 공동농원사업, 러시아의 다차, 독일의 클라인가르텐 유형이 있으며, 주말농장형·다차형 유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사항과 부작용 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 있음.

2) 아름다운 어촌마을·섬마을 조성

- 어촌의 거주여건과 어촌계의 폐쇄성을 개선하여 베이비부머 귀어·귀촌인을 유치
- 여객선 이용요금 대중교통요금화, 선착장, 여객선, 섬의 거주여건 등 개선을 통해 국토와 해양 공간을 쾌적하게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 예술인의 공연장, 연습장, 작업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제공
- 치매,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섬과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치유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등을 조성하여 활용

3) 산림 및 해양 휴양단지형

- 백두대간, 자연휴양림 등 산림이 우수한 지역 인근에 산림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치유와 완도, 태안 등 지리적 여건을 갖춘 지역에 해양휴양단지를 조성하여 해양치유를 필요로 하는 중장년층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도권외의 베이비부머도 유치함.
- 강원도, 백두대간, 지리산, 자연휴양림,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등 입지적으로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에 권역별, 단계별로 조성하여 준건강인, 만성질환자, 재활이 필요한 환자 등이 체류하면서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4) 농산어촌 르네상스를 위한 산림·해양 교류

- 강원도, 백두대간, 지리산 등 산림자원이 우수한 지역 인근에 산림치유원을 확대·개선하고 네트워크로 연계,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등 해안권역별로 해양자원이 우수한 지역에 해양 치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치유원을 조직하여 운영
- 5개 광역권별로 1곳, 제주도와 강원도를 포함하면 적어도 7곳 이상을 조성하여 광역대도시민들도 주변지역에서 산림과 해양자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성

VI. 새로운 시대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제언

- 축을 구축하는 과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기과제로 추진
 - 축을 구성하는 거점의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함.
 - 강호축의 경우 제천의 한방, 원주의 의료기기,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남원의 화장품단지 등의 경쟁력을 강화한 뒤 힐링치유 관련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연계시킬 경우 건강서비스산업구축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함.
- 혁신성장권은 정부의 의지와 정치권의 합의가 있을 경우 비교적 용이하게 추진 가능하나 단기적으로 추진은 용이하지 않음.
 - 중앙정부가 지방에 설치한 청단위 조직을 통합하여 통합청사를 마련하고 통합 청장을 차관급으로, 부처 개별청을 국장급으로 임명하는 사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함.
- 지방경쟁력 거점 육성과 다핵구조 구축과정 중 청와대 및 국회이전,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은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제이므로 단·중기적으로 추진 가능
 - 기업도시, 대학도시, 병원도시, 산업단지재생 등도 중기적으로 추진 가능
 -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활용은 효과가 단기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과제로 판단됨.
- 농산어촌 르네상스를 위한 도농상생발전 관련 제도는 법제도 개선, 지자체, 공단, 민간 등을 활용하여 단·중기적으로 추진 가능
 - 1가구 2주택 중과세 배제, 주민등록제도 개선 등은 비수도권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 필요
 - 일부 체험형 공동체마을은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추진 중이며, 확대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참여도 가능
 -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도 모색 필요

Ⅰ 참고문헌

- 권영섭. 201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토발전축 구축전략”,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틀 모색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권영섭 외. 2019. 분권현 국정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안영훈. 2009. 지역거버넌스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관률. 2020. “수도권집중과 외부효과”. 새로운 시대 균형발전 전략 및 실행과제 제7차 워크숍 발표자료. 국토연구원.
- 통계청. 2020. 전입사유별 수도권 순이동(2009년-2019년)